

<p>「주간 북한경제 동향」은 한주간의 주요기사를 정리하여, 북한 경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작하고 있습니다. www.dprkinvest.org</p>	<h1>주간 북한경제 동향</h1> <h2>Weekly DPRK Business Review</h2>	<p>2009년 4월 6일(월) 통권34호(제2권 제12호)</p>
<p>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 907호</p>	<p>발행처 : 북한투자전략연구소</p>	<p>전 화 02-782-2677 팩 스 02-3452-2312 이 메 일 master@dprkinvest.org</p>

||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시론 이 시론은 남북의 여러 사안에 대한 북한투자전략연구소의 생각과 의견을 담은 글입니다. ||

새 기획 「북한경제를 진단한다」를 시작하며 < I. 『행정처벌법』으로 보는 오늘의 북한경제 >

남북경협사업은 말 그대로 남과 북이 함께 하는 경제사업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 원리와 체제를 옳게 이해하는 것이 경협사업 성공의 첫 걸음이라고 하겠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경협사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빙하기가 깊어갈수록 경협의 해빙기도 다가오고 있는 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올 봄날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준비하며 맞이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도 지혜로운 대처일 것이다.

이에 『북한투자전략연구소』는 다가올 경협의 해빙기를 위해 북한 경제의 현주소를 살피고, 경협사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새로운 기획물 「북한 경제를 진단 한다」를 총 10회에 걸쳐 게재한다.

연재 순서는 아래와 같다. 참고로 본 기획물의 원문은 (주) 거래사랑 홈페이지 (www.krlove.net) [북한투자전략연구소]에서 볼 수 있다.

- 실는 순서 -

- I. 『행정처벌법』으로 보는 오늘의 북한경제
- II. 2002년 7·1조치 이전의 북한 경제
- III. 토지개혁 이후 최대 사변 7·1조치
- IV. 양지로 나온 시장, 시장을 길들이려는 북한
- V. 비슷한 듯 다른 남북의 가격, 재정
- VI. ‘자력갱생’ = 생존을 위한 기업의 무한책임
- VII. 북미관계를 알아야 북한이 보인다
- VIII. 오늘의 일상으로 살펴 본 북한주민의 경제생활
- IX.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 X. 경협사업 성공하기

연속 기획 「북한 경제를 진단 한다」

I. 『행정처벌법』으로 보는 오늘의 북한경제

2004년 7월 북한은 『행정처벌법』을 제정했다. 북한경제 말하면서 웬 뜬금없는 법 이야기인가?

본래 입법은 사후적 개념이다. 다시 말해 어떠한 행태가 일반화 되어 사회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생겼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입법이다. 그래서 법을 보면 그 사회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우리가 현재의 북한경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행정처벌법』을 보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행정처벌법』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행정처벌법』이란 법의 위상 또는 지위 때문이다.

사회적 인식과 문화에 차이가 있어 기계적인 평가는 어렵지만 처벌 형량으로만 본다면 형법에 비해 『행정처벌법』의 형량이 낮다. 고려대 법학연구원 김성욱 연구원 말대로 『행정처벌법』은 ‘『형법』을 적용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위법행위에

대해 해당기관이 행정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조치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행정처벌법』은 입법 목적상 남한의 『경범죄처벌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행정처벌법』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냥 묵과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기존 『형법』이나 『사회안전단속법』 등으로 단죄하기에는 조금은 과한 ‘경미한’ 범죄가 빈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새로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는 어떤 것들일까? 우리가 북한의 『행정처벌법』에 흥미를 느끼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때문이다.

2007년 1월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는 경제 관련 범죄가 많다. 예를 들어 ‘설비·원료·자재를 비법으로 바꾸거나 팔거나 넘겨준 경우’에는 3개월 이하 무보수 노동에 처한다. ‘비법적으로 상행위를 한 자’는 3개월 이하 노동교양을 받아야 한다. ‘세도와 전횡을 부렸거나 특전, 특혜를 요구해 물의를 일으킨 경우’나 ‘뇌물을 주거나 받거나 중개한 자’는 모두 경고 혹은 3개월 이하 무보수 노동의 형에 처한다. 이는 7·1조치 이후 북한에 ‘횡령’, ‘뇌물수수’, ‘권력 남용’, ‘불법 영업’ 등의 자본주의형 범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세 번째는 7·1조치 이후 북한에 무언가 과거의 사회풍조와 다른 큰 변화가 진행 중임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북한도 공식적으로는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법』과 『행정처벌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행위를 범했을 때, 만약 『행정처벌법』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동일 행위로 형법 적용을 다시 받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형법』으로 처벌돼야 마땅할 행위가 그보다 낮은 수위의 『행정처벌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면,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매춘, 고리대, 마약밀매 등은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힘들었던 범죄 행위이다. 북한은 그동안 이러한 반사회주의적인 범죄들을 『사회안전단속법』이나 『형법』으로 처벌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범죄들이 『행정처벌법』 대상으로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범죄들이 북한 사회에 횡행하고 있음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한다. 다시 말해 과거 한 두건씩 예외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형법』 등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사회적 경고 차원에서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발생 정도가 빈번해 모든 범법자를 무겁게 처벌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면 정황 등을 고려하여 달리 처벌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처벌법』 제정은 그만큼 7·1조치 이후 북한 사회에 자본주의형 범죄는 물론 사회풍속 범죄도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제34호 목 차

이주의 칼럼

개성공단, 남북의지 되살려야 ----- 2

이주의 주요 기사

北협동농장 간부들 “화학비료 부족” ----- 3

긴장조성 北의도 차단...경제적압박 시사 ----- 4

KDI ““기다림의 대북전략”, 올해 실질적 영향 나타낼 것 ----- 5

북한 “미국 기업 투자하지 않아 실망” ----- 6

미국 ‘악의 축’ 용어 사용 중단 ----- 7

이대통령 “대북 특사 필요하면 보낼 수 있다” ----- 8

국회 입법조사처 “정부, 남북관계 유연해야” ----- 9

북한, 로켓 준비에서 발사까지 ----- 10

North Korea, economic crisis crowd Obama agenda ----- 11

金總書記の指導スタイルに変化突然訪問・対話も頻繁に ----- 12

추천논문 / 남북교역의 변화와 남북관계 경색의 경제적 배경 --- 13

함께 보는 최근 북안단신 / ----- 13

이주의 북한 관련 행사

● (사)남북물류포럼 조찬간담회

▶주제: 현 단계 남북관계 진단과 개성공단의 장래

▶일시 : 2009년 4월 7일(화) 07:15

▶장소 : 퍼시픽호텔 장미홀(3층)

● 평화연대 토론회

▶주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해법은?

▶일시 : 2009년 4월 8일(수) 13:00

▶장소 : 배제정동 학술지원관 3층

● 제7차 남북경협정책포럼

▶주제: 북·중 경제관계 현황과 3국(한·중·북) 경제협력

▶일시 : 2009년 4월 10일(금) 14: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11층

이 주의 칼럼

개성공단, 남북의지 되살려야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 지난해 11월 집권 여당 대표. 북측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남측 정부를 압박하고 국내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때 “그 정도의 공단은 수백 개가 있는데, 그거 하나가 우리 경제에 무슨 악영향을 끼치겠느냐”고 말해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개성공단에 대한 현 정부의 속내가 ‘그런 것이구나’라는 식으로 해석되어 충격을 던져주었다.

#2. 지난주 중반 보수적 성향의 야당 총재.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개성공단 출입이 파행을 거듭할 때 “개성공단은 북한이 남한을 갖고 노는 지렛대가 되고 말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남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과감한 결단도 내려야 한다고 초강경발언을 던져 세상을 놀라게 했다.

#3. 이번주 초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이제 저희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재산은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한정부든 북한정부든 그 어느 쪽도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듣는 입장에서선 착잡, 참담이었지만 고개가 끄덕여지는 면도 있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런 사태를 예상할 수 있었을까. 격세지감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위대한 실험, 진정한 통일의 경제학, 남북공동번영 및 호혜협력의 대표적 모델 등등 온갖 찬사와 기대 속에 출범했던 개성공단 사업. 바로 그 사업이 언제부터인가 동네북이 되고 말았다. 한반도의 옥동자에서 애타단지,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것 같은 분위기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우려다. 하나둘씩 결실을 맺으면서 실험은 성공리에 한발자국씩 나아가고 있는데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거대한 역풍을 맞은 형국이다.

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직접적인 책임은 북한에 있다. 입주기업들의 고통과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북측이 ‘통일을 향한 민족적 대과업’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 남한도 책임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개성공단 2단계 사업도 없다는 당국자의 발언을 비롯해 근로자 숙소 문제 등 개성공단 운영에 관한 남북간 합의 사항의 이행에 대한 미온적 태도는 북측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결국 남이든 북이든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당국의 의지가 약화된 것 같은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개성공단 출범 초기, 개성공단에 대해 무한한 애정을 보여주며, 그 성공을 간절히 기원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던건만, 그 많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개성공단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몇 십년간 남북경협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는 어느 기업인의 뼈있는 한 마디가 아직도 귓가에서 맴돌고 있다. 결국은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의지이다. 이 사업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결집시키는 노력이 새삼스럽게 필요하고 또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글의 원문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311802555&code=990304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北협동농장 간부들 "화학비료 부족"

-- 3월 30일 중앙일보

북한의 지방 협동농장 간부가 북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화학비료의 부족을 시인해 눈길을 끈다.

화학비료가 부족한 현재의 상황을 시인하면서 농민들의 노력을 통해 열악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1999년 이후 거의 매년 남한으로부터 20~30만 규모의 화학비료를 지원받아 왔으나 작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비료를 지원받지 못하면서 비료난을 겪고 있다.

북한은 이처럼 비료 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에서 2만5천608t의 비료를 수입해 1년 전 같은 기간 635t에 비해 40배 가까운 수입 증가세를 보였다.

北, 외국인 접대 양성기관 교사 신축

-- 3월 29일 연합뉴스

북한 내 호텔과 외국인 숙소 등에서 일하는 요리사와 접대원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인 평양 대외봉사학원이 새 교사(校舍)를 건설 중이라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9일 전했다.

조선신보에 따르면, 5층 규모인 새 교사의 골조 공사가 현재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내.외부 미장과 마감공사를 하면 교육설비와 기재를 설치하게 된다.

1985년 9월 설립, 2년제로 운영되는 이 학원에서는 해마다 수백 명의 대외부문 요리사, 접대원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6.15선언 9주년 민간행사 남북 따로 개최

-- 3월 30일 연합뉴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가 최근 북한 평양에서 열린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에서 6.15선언 9주년 행사를 남북 공동으로 열 것을 제안했으나 북측이 "현 정세"를 이유로 거부함에 따라 민간차원에서도 공동행사가 열리지 않게 됐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지난해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간 긴장한 정세를 이유로 당초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던 공동행사를 금강산에서 열자고 주장, 남북 당국의 참여없이 민간차원의 공동행사만 금강산에서 열렸었다.

올해는 북측위가 민간차원의 공동행사에도 난색을 표함으로써 6.15 기념행사가 처음으로 남한과 북한 따로 열리게 됐다.

6.15남측위는 30일 "남측위는 당국간 정세긴장에도 불구하고 민간 통일운동은 경색된 정세를 돌파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올해 6.15행사를 남, 북, 해외 공동행사로 금강산에서 열 것을 제안했으나 북측위는 '현 정세하에서는 공동행사를 추진하기 어렵다'며 남, 북, 해외가 각기 지역에서 행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피해보상 받을 수 있었는데...

-- 3월 30일 주간무역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교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북한의 잦은 개성공단 통행제한에 따른 피해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역보험은 남북협력기금법상 수출입은행에 설치된 보험으로, 북한이 실시하는 통행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에게 남한 정부가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24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101개 업체와 공장을 건설 중인 37개 업체 등 총 138개 업체 가운데 교역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역보험 가입실적이 전무한 이유는 개성공단의 안전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정경분리의 원칙이 지켜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교역보험을 통해 지원된 보험금은 '0원'이다.

반면 개성공단 출입통제로 남한 기업들이 입는 피해는 커져만 가고 있다. 지난 15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단입주기업 대표들은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겨 제품을 제대로 생산할 수 없다"거나 "납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최근 발주 계약을 취소당했다"는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보상해줄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남북 관계는 항상 유동적이어서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면서 "교역보험을 들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개성공단유지 발언 주목

-- 3월 30일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파행을 겪었던 개성공단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관계없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30일 보도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개성공단을 폐쇄할 것 인지를 묻는 질문에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놓기 위해 개성공단은 유지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종 목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고 남북간 공존하자는 것이므로 강경 대응이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신중한 대응책이 나올 것임을 예상케했다.

관측자들은 이 대통령의 이번 개성공단 관련 발언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후 정부의 대응 기조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보고 있다.

北 개성직원 억류 배경놓고 해석분분

-- 3월 30일 연합뉴스

북한이 30일 규정 위반 혐의로 개성공단의 우리 측 직원 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그 배경과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이 직원이 북의 정치체제를 비난하는 등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이 라고 통일부는 전했다.

해당 직원에 대한 조사에 걸릴 시간과 처분 결과에 따라 사태가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일단 북한이 지난 17일 북·중 접경지역에서 미국인 기자 2명을 억류한 것과 연결짓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음 달 4~8일로 예고한 장거리 로켓 발사 후 한·미 등이 강경한 대북 제재 행보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 차원이라는 얘기도.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최근 개성공단 통행 차단과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을 카드삼아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는 전략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행 차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폐쇄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어렵게 만듦으로써 `개성공단을 포기하기 싫으면 대북정책을 전면 전환하거나 미국을 때밀어 북미대화에 나오도록 유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개성억류’로 남북합의 허점 또 노출

-- 3월 30일 연합뉴스

개성공단에서 현대아산 직원 A씨가 30일 북한 당국에 억류됨에 따라 기존 남북간 합의의 문제점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2004년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이하 합의서)' 제10조는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뒤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 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같은 조문이 `남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명시한 점이다.

북한은 A씨가 북한 여성의 탈북을 책동했다는 주장과 함께 우리 측에 보내온 통신문 곳곳에서 이번 사건이 `엄중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뉘앙스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문제는 복잡해질 수 있다.

`엄중한 위반 행위'의 내용에 대한 남북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데다 현재 남북 당국간 대화가 단절돼 관련 논의를 진행할 상시적 협의체가 없기 때문이다.

또 A씨가 북한의 사법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만하게 풀려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할 정부 입장에서는 `인원은 지구(개성공업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존중하고 준수한다'고 규정한 합의서 2조 조문이 불리한 장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개성공단내 우리 국민도 북한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으로, 백면 양보해서 A씨가 실제로 북한 여직원에게 탈북을 종용했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 법에는 큰 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북한법에는 중대

사안일 수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남북이 개성공단 지역에 적용할 형사문제 처리 규정을 완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한 셈"이라고 말했다.

北 "南PSI 참여는 선전포고..즉시 단호대응"

-- 3월 30일 연합뉴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0일 남한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를 이유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지구상(PSI)에 참여한다면 이는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우리는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담화는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은 나라의 첨단 과학기술을 더 높은 경지에 올려세워 강성대국 건설의 기둥을 굳건히 하고 민족과 인류공동의 번영에 이바지하려는 숭고한 일념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서 문제시될 것이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지난 23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PSI의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일부 참여만 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한반도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것"이라면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지구상 전면참여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北, 억류 여기자 '적대행위 혐의' 확인 주장

-- 3월 31일 노컷뉴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31일 억류중인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조사 결과 "증거자료들과 본인들의 진술을 통해 불법입국과 적대행위 혐의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러나 미국 여기자들의 '적대행위 혐의'가 구체적으로 간접 혐의를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통신은 또 "이들에 대한 조사과정은 국제법에 부합되게 영사접촉과 적절한 대우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고든 두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주말에 면담이 이뤄졌다"면서 "스웨덴 대사관의 한 외교관이 이 여기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났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예고하는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여기자 2명을 다목적 협상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포스트는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과의 협상이나 국제사회의 지원 문제등에서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기자 문제를 최대한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긴장 조성 北의도 차단... 경제적 압박 시사

-- 3월 31일 동아일보

북한이 예고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점(다음 달 4~8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등 관련국들이 차분하게 조율된 대응 방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힌 것도 이제 상황을 냉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위기 고조를 방지해야=이 대통령의 언급은 각국의 대응 방향이 뜻하지 않은 긴장 고조로 이어지는 듯한 최근 정세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과 일본이 미사일 요격을 언급한 것은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면 대응한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요격하는 것으로 오해된 측면이 있다”며 “오해의 확산이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수위 조절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제재 수위 조절에 부심=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은 확고하다. 정부의 대응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으로 참여하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 논의에 적극 협력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 세계식량계획 주재 허용

-- 3월 31일 노컷뉴스

북한 당국이 이 달 말까지 미국 정부의 식량 배분을 맡은 민간단체 요원들의 철수를 요구한 가운데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에 계속 주재하면서 식량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식량계획(WFP) 아시아 사무소의 폴 리즐리 대변인은 30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북한에 주재 중인 50여 명의 요원은 현재까지 아무도 철수하지 않았다”면서 “매우 제한된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즐리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식량 지원 중단에 따라 한때 북한 내 요원 철수나 현지 사무소 폐쇄를 검토했지만, 현재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에 지원하는 미국 정부의 식량 배분을 맡은 5개 민간단체들은 북한 당국의 요구로 예정대로 이 달 말까지 식량 분배 인력을 철수시킨다고 말했다.

KDI “'기다림의 대북 전략', 올해 실질적 영향 나타낼 것”

-- 3월 31일 뉴시스

대북 관계에 있어 우리나라의 이른바 '기다림의 전략'이 올해부터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석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31일 발간한 KDI 정책포럼 '남북교역의 변화와 남북관계 경색의 경제적 배경' 보고서에서 “올해 더욱 강경해진 북한의 태도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남북교역의 위축과 이로 인해 북한경제의 고통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을 압박해 새로운 대북 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연구위원은 “2008년 초중반까지는 남북 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북 교역에서 누리는 경제적 혜택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2008년 4분기를 기점으로 이러한 상황이 반전 됐다”며 “특히 올해들어 북한은 남북교역의 위축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이후 북한은 남북 교역을 통한 경제적 혜택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분명한 반응을 보였다”며 “따라서 한국의 이른바 '기다림의 대북전략'은 특히 올해부터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로 인한 북한의 고통이 클수록, 북한 역시 각종 비경제적 수단으로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 남북관계 불안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北 잇단 초강경 공세 ... 곤혹스러운 南

-- 3월 31일 노컷뉴스

북한이 로켓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등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잇따라 선제적인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0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해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론에 대해서도 안보리에 회부만 해도 북핵 6자회담이 파탄나고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원상복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심지어 추가 핵시험까지 시사하며 반발한 바 있다.

북한은 이와함께 개성공단에서 우리측 직원 1명을 억류.조사하고 있고, 억류중인 미국 여기자 2명에 대해 적대행위 혐의가 확정됐으며 기소절차 진행 방침을 밝히는 등 동시다발적인 대남.대미 압박전술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의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안보리 제재 움직임이나 한국의 PSI 참여 문제에 대해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한다'는 특유의 전술을 통해 로켓 발사 후폭풍의 최소화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北이 자랑하는 '자연흐름식물길'

-- 3월 31일 통일뉴스

“자연흐름식물길들은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는데서 날마다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북한 주간신문인 <통일신보>는 최근호(2009.03.28) ‘은을 내는 자연흐름식물길’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은 강성대국건설의 절박한 요구”라면서 이같이 ‘자연흐름식물길’을 자랑하고 나섰다.

신문은 “공화국(북한)은 모든 토지를 기계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규모 규격포전(規格圃田)으로 변모시키는 것과 함께 물을 충분히 대주기 위한 수리화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특히 후자와 관련 “공화국에서는 농사를 안전하게 짓기 위해 우리 식의 자연흐름식물길 관개공사에 큰 힘을 넣고 있다”고 알렸다.

‘자연흐름식물길’이란 “양수동력을 전혀 쓰지 않고 말 그대로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도록 물길을 짜여주어 논밭에 생명을 공급해주는 우월한 관개체계”라는 것이다.

北 '역병'에 강한 감자 개발, 생산량도 ↑

-- 4월 1일 노컷뉴스

북한 과학자 두 명이 네덜란드의 바게닝겐 대학 산하 국제식물연구소와 함께 감자 역병에 저항이 강한 감자 품종을 개발해 생산량을 현재와 비교해 2배 이상 늘릴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의 바게닝겐 대학 국제식물연구소의 마텐 용스마 연구원은 "북한 과학자 두 명이 지난 7월 네덜란드에 들어와 국제식물연구소 연구팀과 합동으로 감자 역병에 대해 연구해 지난 1월 감자 역병에 저항성이 강하고, 병충해의 피해를 덜 입는 새 품종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밝혔다.

北, 개성직원 사흘째 조사..장기화 고비

-- 4월 1일 연합뉴스

북한 당국에 의해 탈북책동.체제비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당한 채 사흘째 개성공단에서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일 "현지에서 직원에 대한 접견과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북측은 `알았다.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출입사업부 건물 안에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추방 등 형태로 사안을 조기에 매듭지을지, 미국 여기자 사안처럼 장기화하려 할지는 현재로선 예단키 어렵다"며 "일단 오늘, 내일 상황을 지켜보면서 북한이 일차적으로 조사결과를 내놓는 것을 봐야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A씨의 상태에 대해 "북한에는 감옥에 구금하는 것과 집에서 못나오게 하는 것, 어느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등 3가지 형태의 `구류'가 있다"며 A씨가 현재 기술적으로 구류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개성공단 역류, 北 '협상카드'로 써먹나

-- 4월 1일 노컷뉴스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에 대한 북한의 역류조사가 3일째로 접어들면서 이번 사태가 북한의 로켓발사 정국과 맞물려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이번 역류사태는 로켓 발사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북한이 자국에 대한 적대 행위라고 주장하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미국 여기자들과 유 모씨가 로켓발사 정국에서 외교 카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미국 여기자 2명의 기소방침은 '조용한' 해결을 원하는 미국에 로켓발사 이후 정국에서 이를 외교 카드로 십분 활용할

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

같은 맥락으로 유 씨 사건도 최근 한국정부 내 외교안보라인에서 언급되고 있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 등 대북 강경드라이브 분위기를 의식한 북측의 대응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

결국 미 여기자 문제와 함께 개성공단 유 씨 사건도 북한이 로켓 발사 이후 '협상카드'로 연계할 가능성이 커보여 사태 장기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미국 기업 투자하지 않아 실망"

-- 4월 1일 노컷뉴스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대북 적성국 교역법을 폐지했는데도 미국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지 않는 데 대해 대단히 실망하고 있다고, 평양을 방문한 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가 밝혔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지냈고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던 셔크 소장은 "북한이 미국의 장기적인 식량 원조에 대한 약속을 원했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식량 지원에 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만간 미국 내에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활발한 투자와 교역관계를 발전시켜 미국과 북한 간에 장기간의 신뢰를 형성해 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셔크 소장과 함께 북한을 방문했고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의 전미북한위원회의 캐린 리 사무국장도 "이번에 만나 본 북한 지도부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두 가지 중요한 대북 제재를 해제한 이후, 관련 경제 법규와 북한에 대한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았다"면서 "미국 정부에 대해 명백한 실망감을 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셔크 소장을 포함한 4명의 미국 대표단은 최근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취한 조치에서 확연히 드러나듯이, 북한에 대한 투자에는 아직도 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꺼리지, 미국 정부의 투자 제한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北, 국제법 준수 외양으로 '정상국가' 강조

-- 4월 1일 중앙일보

북한이 최근 미국 여기자 역류 사건과 로켓 발사 등 세계의 이목을 끄는 중요 사안을 다루면서 종래와 달리 국제법과 규범을 준수하고 있다고 연일 강조하는 것은 '정상 국가'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포석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새로 출범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직접 대화를 계속 시도하면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 북한이 장차 미국과 더 큰 협상을 앞두고 절차적 문제로 책잡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측면도 있다.

북한이 역류 미국 여기자들을 조사해 재판에 넘기는 정식 사법절차를 밟는 것도 그동안 보지 못하던 일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31일 "이제까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정상 국가'가 아니라고 비판해온 데 대한 북한 나름의 대응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절차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자신들을 향한 외부의 비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국제적 절차나 관행을 따르는 게 주된 목적이라기보다는 미국과의 큰 협상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본격 협상도 하기 전에 책잡히지 않기 위한 행동"으로 봤다.

개성공단 출입규정 모호... 北 자의 해석 여지 줘

-- 4월 2일 한국일보

1일로 개성공단 남측 직원 한 명이 북한에 억류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다.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출입체류 규정이 애매 모호하고 남북 대화가 막혀 있는 것이 그 이유다.

정부는 2004년 1월 '개성공단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뒤 후속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합의서의 '출입체류 문제의 전반적 협의와 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항(12조)도 이행되지 않았다.

합의서엔 개성공단에서 금지된 위반 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북한이 남측 인원을 조사할 경우 조사 기간과 장소, 방식, 피조사자의 권리 등에 대한 내용도 없다.

합의서 2조의 '남측 인원은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존중 준수한다', 10조의 '엄중한 위반 행위는 별도의 남북 합의로 처리한다'는 부분은 북한이 이번 사태를 장기화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억류된 직원의 행위를 '엄중한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2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북한 법을 적용, 이 직원을 기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0조의 '남북 합의'에 방점을 찍으면서 "남북 간 벌어지는 일에 대해선 남북 합의서가 최우선"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북한이다.

이번 사태를 풀 수 있는 가장 효율적, 결정적 수단은 남북 간 대화다. 하지만 대화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고, '지렛대'로 쓸 경제 지원도 중단된 상태다.

요미우리 "日 정부, 위성 판단 부상"

-- 4월 2일 노컷뉴스

일본 정부 내에 북한의 발사체를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으로 보는 의견이 부상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간단한 통신기능을 가지고 있고 지구를 몇차례 도는 정도의 인공위성 정도라면 북한도 제조할 기술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의 발사체가 일본을 위협하는 미사일이라는 견해를 유지해왔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인공위성 발사라 하더라도 그 종류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악의축' 용어 사용중단

-- 4월 2일 세계일보

미국이 북한 등을 지칭했던 '악의 축'(axis of evil) 용어 사용을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가진 유로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악의 축'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사용했던 용어라면서 더이상 사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어 클린턴 장관은 "우리는 이란과 긍정적으로 협력할 분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란이 대화의 상대임을 분명히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협력분야를 찾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른 국가의 내정을 간섭하거나 테러를 지원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란과 대화(engage)하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 이라크와 함께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 사담 후세인 축출 등 강경 자세를 견지했던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소프트 파워'를 앞세워 대화에 나설 것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北 "사소한 요격 움직임에도 보복타격"

-- 4월 2일 연합뉴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2일 '중대보도'를 발표, 자신들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조치와 관련, "우리 혁명무력은...고도의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평화적 위성에 대한 사소한 '요격'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지체없이 정의의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참모부는 "우리의 혁명무력은 평화적 위성 요격에 나서는 자들에게 단호한 불벼락을 안길 것"이라며 특히 일본 정부의 대응방향을 집중 비난하고 "일본이 분별을 잃고 우리의 평화적 위성에 대한 요격 행위를 감행한다면 우리 인민 군대는 가차없이 이미 전개된 (일본의) 요격수단뿐 아니라 중요대상에도 단호한 보복의 불벼락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참모부는 이어 미국에 대해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와 관련한 자기(미국)의 입장을 명백히 밝힌 것 만큼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전개된 무력을 지체없이 철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남한에 대해선 "미.일 상전에 아부하며 민족의 자랑인 우리의 위성발사에 훼방을 놓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총참모부는 주장했다.

정부, 민간 대북지원물자 반출도 '제동'

-- 4월 2일 통일뉴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앞둔 2일, 정부가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반출 재개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대북 인도적 지원 자체가 '무기한 연기'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2일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점(4월 4일~8일)까지 콩.의약품.이유식 등 시급한 생활필수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북지원 물자) 반출을 연기해 줄 것을 민간단체들에게 오늘 오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2일 인천 부두에서 환송식까지 마치고 3일 북송될 예정이었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농민본부'(6.15농민본부)의 못자리용 비닐 반출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민간단체의 성금으로 마련된 인도적 대북 지원 물자 반출이 정부에 의해 가로막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또 민 사무처장은 "북측의 국가적 행사로 인한 순간적 조치라면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물자 반출이 가능되어야 맞는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고 이것을 기회로 계속적으로 무기한 연기된다고 하면 정부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무기한 연기'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북한의 위성체 발사나 긴장된 남북관계 경색 등은) 사실상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10년 동안 남북관계가 정상화됐고 정부가 이를 계승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북녘 못자리용 비닐 북송 사업'은 6.15농민본부가 북측의 조선농업근로자연맹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2009년 남북농민 교류협력사업의 첫 사업으로 큰 의미를 가졌다.

일본, 北미사일 발사 관련 대북 전면금수 방침

-- 4월 3일 뉴시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인공위성' 명목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4~8일 예고기간을 앞두고 대북 전면금수 조치를 발동할 방침을 굳혔다고 니케이 신문이 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 의거, 독자적인 대북 경제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은 사치품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품목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대북 수출금지 조치를 모든 무역 품목으로 확대할 생각이다.

또한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금융규제 강화도 검토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北-유니세프, 10월 주민영양 조사< RFA >

-- 4월 3일 연합뉴스

북한 당국이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와 공동으로 오는 10월 북한 전역에서 주민 영양상태 조사를 벌인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전했다.

방송은 유니세프의 고팔란 발라고팔 평양사무소 대표의 말을 인용, 이번 조사는 2004년 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했던 조사보다 큰 규모로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한 함경북도도 양강도도 포함해 북한 전역에서 어린이와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美의회, '대북 경제제재 해제 금지 법안' 추진

-- 4월 3일 노컷뉴스

미국 의회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행정부가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강제 규정한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하원이 추진 중인 이 법안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북한에 대해 현재 가해진 경제제재를 행정부가 앞으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의회 관계자는 "이 법안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고 미국인 여기자를 억류하고 6자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을 들어 행정부가 대북 경제제재를 계속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미 의회 관계자는 "북한의 과거와 현재 행적에 비춰볼 때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테러지원국 해제와 상관없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점이 법안을 마련 중인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 민간에 방북 최소화 권고

-- 4월 3일 연합뉴스

정부는 4~8일로 예고된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기간을 전후로 우리 국민의 방북을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하도록 민간에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기간을 전후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해당기간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북한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기업이나 민간 단체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권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통령 "대북 특사 필요하면 보낼 수 있다"

-- 4월 3일 한겨레

이명박 대통령은 3일(현지시각) "(대북) 특사는 우리는 필요하면 보낼 수도 있다"며 "북한이 특사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면 하고,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대화는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북 특사 파견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나는 북한에 대해 신뢰 있는 대화, 원칙 있는 대화를 하자고 제의하고 있다"며 "실용적 외교가 강경하다는 인식과는 다르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전면 참여와 관련해 "북한의 태도를 보아가며 북한이 6자 회담을 해결하는 자세에 달린 것이지 북한의 협박 여부에 달린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의 조치를 보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권종락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 통일위원회에서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피에스아이에 전면 참여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나'는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현대아산 조건식 사장 "억류 직원 잘 있다"

-- 4월 3일 연합뉴스

현대아산 조진식 사장은 3일 북한에 억류된 직원이 남북합의서 규정에 따라 잘 있다는 낙양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북한의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 억류와 관련, 사태의 조기해결을 위해 이날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국사무소를 통해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돌아와 이같이 밝혔다.

조 사장은 "직원이 잘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했고 북측 관계자들을 만나 사장으로서 안타까운 심정과 남측의 우려를 전달했다"며 "북측은 남북합의서 규정을 강조하며 직원의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고 조사에서 강압은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장소에 대해 "북측이 유 씨를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단언했다"며 "북측에 직원의 면담을 요구했는데 합의서 규정에 조사 중인 직원을 만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며 거절해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 개성공단에 신변안전지침 하달

-- 4월 4일 연합뉴스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한 것과 관련, 4일 오전 개성공단·금강산 체류인원에 대한 신변안전 관리 지침을 하달했다.

이번 신변안전 관리지침은 현지에서 이동을 최소화하고 야간에 이동을 금지할 것, 물품 반출입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또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 현지 안전관리 반장의 지휘 하에 정확한 체류인원 현황을 파악하고 연락체계를 유지할 것, 북한 인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자제하고 접촉시 언행에 신중할 것 등 내용도 포함됐다.

北대변 조선신보 "北 로켓기술 수출" 언급

-- 4월 4일 연합뉴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장거리 로켓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고 대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비공식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2012년 구상 안받침한 광명성 2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 시기 조선의 최대 과제는 경제부흥"이라며 "대형 로켓의 개발은 우주공간에 운반된 각종 위성의 이용, 로켓 개발 과정에 탄생한 첨단기술의 민수 이전, 위성발사의 상업화와 로켓기술의 수출 등 일련의 경제적 효과를 상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적' 관점에서 로켓 기술의 해외이전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지만, 국제사회가 북한 미사일 기술의 해외이전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식한 우회적 위협으로 보인다.

신문은 이어 현재 북한의 대내외 정책은 "피동적인 방어"가 아니라 "주동적인 공격의 양상을 띠고 있다"며 "인민을 위한 계획"인 위성 발사를 문제시하고 궤방을 높였던 적대국과의 관계도 무조건 결산하려 할 것"이라고 말해 로켓 발사 이후 미국 등을 대상으로 외교적 공세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 "평양체류 南인원 오늘 사실상 전원귀환"

-- 4월 4일 헤럴드경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한 가운데 4일 평양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전원 귀환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로켓 발사 전후로 북한내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확보를 위해 방북 및 북한 체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어제(3일)까지 교류협력사업을 위해 평양에 체류하던 82명중 1명을 제외한 81명이 항공편을 이용, 오늘중 중국 베이징(北京)과 선양(瀋陽)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日, 北로켓 발사 탐지오류 소동

-- 4월 4일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엄중 경계하고 있는 가운데 4일 낮 12시16분 "북한에서 비상체가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잘못 전달하는 바람에 한때 혼선을 빚었다.

NHK는 이날 정부가 각 성청은 물론 각 지자체와 언론기관을 연결해 운영하고 있는 긴급정보 전달체계인 'Em-Net'에 뜬 정보를 인용, 북한에서 비행체가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으나 정부가 5분뒤 '탐지오류'로 정정 발표했다.

"안보리 대북 결의 초안 회람중"

-- 4월 5일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 사이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에 대비한 대북 결의안 초안이 회람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미국의 폭스뉴스는 이날 AP통신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만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현재 회람 중인 결의안 초안은 북한이 지난 2006년 핵실험을 강행한 뒤 채택된(대북) 결의의 요구와 제재를 재확인하고 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정부, 남북관계 유연해야"

-- 4월 5일 세계일보

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대북정책과 관련, "정부는 장기적으로 남북관계를 유연하게 가져감으로써 긴장발생의 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작성한 '북한의 한반도 긴장고조와 대응방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에 일정한 원칙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한국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물리적 대응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며 "물리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하도록 군사적 대응태세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기적으로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를 제고하는데 협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제공조의 강화도 촉구했다.

靑, 北로켓 11시30분 15초 발사 확인

-- 4월 5일 연합뉴스

청와대는 북한이 5일 오전 11시30분 15초에 로켓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인 만큼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북한, 로켓 준비에서 발사까지

-- 4월 5일 연합뉴스

지난 2월 3일, 정보당국은 위성을 통해 북한 평안북도의 한 군수공장에서 원통형 물체로 추정되는 부품을 실은 열차가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기지로 향하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정보당국은 이 물체가 대포동 2호 미사일일 것으로 보고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미사일로 보이는 물체를 탐지한 지 나흘 뒤인 2월 7일, 북한 노동신문은 이란이 '오미디'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리자 '평화적인 우주 이용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 있는 물체를 염두에 둔 성명이라며 북한이 대포동 2호를 발사한 뒤 위성발사라고 주장해 유엔에서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1718호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기지의 물체를 미사일로 규정하고 강력 경고에 나섰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미사일 발사하면 남북관계, 동북아시아 평화에 위협이 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자 2월 16일 북한은 "반공화국 적대세력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보자료를 인용해 "형설수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무엇이 날아올라 갈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 궁금증을 증폭시켰습니다.

2월 17일, 중국은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북한으로 보내 6자회담 진전 방안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협의에 나섰습니다. 미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한다는 보도를 접했지만 정보에 대한 코멘트는 하지 않겠다. 확실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2월 24일, 북한은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시험통신위성 발사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광명성 2호 발사준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우리나라의 위성발사 기술은 경제강국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추진체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이 발견된 지 한 달이 지난 3월 3일,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에는 제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쏘아 올리는 로켓에 대해 요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5일, 북한은 남한 전역에서 실시되는 키 리졸브 훈련을 나흘 앞두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키 리졸브' 연합훈련 기간 자기 측 영공을 통과하는 남측 민항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선포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의 로켓 요격 가능성에 대해 보복타격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선인민군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우리의 평화적 위성에 대한 요격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위력한 군사적 수단"에 의해 즉각 대응타격하고 요격행동으로 넘어갈 경우 "투입된 모든 요격수단들 뿐 아니라" 미.일과 남한의 "본거지에 대한 정의의 보복타격전을 개시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평화적 위성에 대한 요격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미사일이나 위성이나를 두고 정보가 엇갈리는 가운데 데니스 블레이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은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인공위성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3월 11일 방미 중인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 후 가진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며 "미사일 발사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든 안보리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 우리는 그것이 일치된 입장이고 6자 회담 개별 회원국도 북한이 더 나아가지 않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3월 12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2호'를 4월 4일에서 8일 사이에 발사할 것임을 국제해사기구, IMO에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제공한 좌표

들을 통해 발사체의 정확한 궤도 파악에 나서는 한편 발사 시기 무렵 궤도 주변의 안전조치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3월 13일 북한이 '위성발사체' 발사 계획을 국제기구에 통보한 것과 관련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우려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계획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군도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비해 위성 발사 시 경보

시스템을 총가동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북한에서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독자적으로 실시 중인 대북 제재를 강화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영국도 직접적인 채널을 통해 북한에 우려를 전했다며 발사가 이뤄지면 강력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빌 라멜 영국 외교부 부장관

"영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이 인공 위성이건 미사일이건 관계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분명'하고 '합의된' 메시지를 전달했다"

국제사회가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제재할 방침을 세우자 북한은 북핵 6자회담에 불참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3월 26일, 북한은 로켓을 발사대에 장착하는 작업을 시작하면서 로켓 발사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시 안보리에 문제를 제기하기로 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발사할 경우 심각한 안보 위협 및 도발이다. 1718호에 명백히 위반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은 유엔 차원의 제재 방침을 밝히고 일본은 미사일 요격명령을 하달하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도 북한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3월 27일 워싱턴에서 연례 회담을 열고 북한의 로켓 발사 대응책 및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3국은 협의에서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안보리 회부가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구체적인 사후 대응 방안을 조율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로켓 발사 작업 탐지를 위해 이지스 구축함을 공해상으로 보냈습니다.

3월 30일, 북한은 지난 20일 한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참여를 검토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선언했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이것은 동족에 대한 불신과 적대의식에 환장한 나머지 국제적으로 공인된 평화적 우주과학 연구에 합법성도 안중에 없는 정치 시정배들의 무모한 소동이며 우리의 존엄과 자주적 권리에 대한 난폭한 도전이라고 지속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에서 연례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4월 1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있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국제사회가 만류해온 발산데 발사가 있다면 유엔 안보리의 대응이 있을 것이다. 수위에 대해선 말씀 드리긴 어렵다."

이런 가운데 미국 CNN방송은 4월 1일 군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로켓에 연료 주입을 하고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연료 주입으로 로켓 발사가 임박하자 6자 회담 당사국들의 표정도 다양했습니다.

미국은 정부 관계자들의 대북관련 언급도 빈번해지면서 정부 내부의 긴박감이 고조됐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논평을 자제하며 사태를 예의 주시했으며 일본은 북한의 로켓이 본토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점검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한.미.일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3국은 유엔 차원에서의 강력한 대응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안보리에서 추가적인 대북결의안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엔 차원에서의 대응과 별도로 경제제재와 같은 독자 대응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

국제사회의 로켓 발사에 대한 긴장과 우려 속에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4월 2일 이른바 '중대보도'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위성에 대한 사소한 '요격'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지체 없이 해당 국가에 정의의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월 3일, 북한의 로켓 연료 주입이 거의 끝나 이르면 4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으로 관측되자 한반도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부처는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런던에서 열린 G20에 참석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자체가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718호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두 달여간 국제사회의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오늘 북한은 로켓을 쏘아올렸습니다.

"日 北로켓발사에 과잉 대응"

-- 4월 5일 아시아투데이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에 일본 정부가 과잉 대응하고 있고, 이러한 대응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지적도 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4일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으나 미국과 일본 등은 사실상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보고 있다고 전하면서 일본이 이 문제에 약간은 이상할 정도로 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본이 자국 영공으로 떨어지는 북한 로켓의 파편은 무엇이든 요격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로켓 발사를 우려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부에서는 일본이 로켓 파편의 위험을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North Korea, economic crisis crowd Obama agenda

오바마의 (G20에서의) 핵심 아젠다는 북한문제와 경

제위기이다

-- 4월 3일 AFP

출처 <http://www.google.com/hostednews/afp/article/ALeqM5jLgME0ozDwO8NqECoduuOrbv0m2A>

LONDON (AFP) — President Barack Obama juggled the brewing crisis over North Korea's rocket launch with the hard slog of framing a global economic rescue effort, on the second gruelling day of his debut overseas trip.

Obama, on the first leg of a three-summit swing and onward journey to Turkey, joined the top table of leaders of the world's dominant and emerging economies at the G20 summit in London's regenerated docklands.

He also forged new openings in his bid to overhaul US diplomacy, in talks with South Korea's president darkened by Pyongyang's preparations for a missile test that could emerge as the first big foreign crisis of the Obama presidency.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북한 로켓 발사 문제로 인한 위기를 차단하는 것과 글로벌 경제 위기 구제노력에 그의 첫 해외방문 두 번째 날의 바쁜 일정을 소화하였다. 오바마는 3국 정상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하고 터키로의 여정을 옮겼으며, 세계 경제 선진국과 신흥국 정상이 모이는 G20 회담이 열리는 런던에 합류했다. 그는 또한 그의 대통령 임기 중 첫 번째 외교적 위기인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로 인해 분위기가 좋지 않은 남한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의 새로이 정비된 외교 정책을 선보였다...

Obama to discuss N.Korea with China's Hu at G20
오바마가 G20에서 중국 후진타오와 북한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 3월 28일 Reuter

출처 <http://www.reuters.com/article/newsMaps/idUSTRE52R1LK2090328>

WASHINGTON (Reuters) - President Barack Obama will discuss concerns about a possible North Korean missile launch with Chinese President Hu Jintao at the G20 summit next week, White House officials said on Saturday.

"It's an opportunity to solidify what has been a very good start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White House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er Denis McDonough told reporters in a conference call, referring to the Hu meeting.

"We'll obviously want to take an opportunity to discuss our shared concerns about preparations in North Korea for a launch that we, as you know, would consider to be counter to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G20에서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과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지난 토요일(3월 28일)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의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기자회견에서 후진타오와의 회견이 우호적인 출발선 상에 있는 미·중 양자 관계가 보다 단결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부보좌관은 '우리는 UN 안보리 결의안 1718에 대한 위배로 간주되는 북한의 (위성) 발사 준비가 중·미 간의 공동 관심사로 이를 (후진타오와) 논의하기를 분명하게 희망한다'고 하였다...

라고 하였다. 부보좌관은 '우리는 UN 안보리 결의안 1718에 대한 위배로 간주되는 북한의 (위성) 발사 준비가 중·미 간의 공동 관심사로 이를 (후진타오와) 논의하기를 분명하게 희망한다'고 하였다...

金總書記の指導スタイルに変化突然訪問・対話も頻繁に 김 총서기 지도 스타일에 변화, 돌연 방문·대화도 빈번히

-- 4월 2일 아사히신문

北朝鮮の金正日（キム・ジョンイル）総書記の現地指導のスタイルが昨年秋から変わった。北朝鮮関係筋などが明らかにした。指導先を突然訪れる、人々と会話を交わす、1カ所の訪問時間を短くして数をこなす—などの特徴があるという。

関係筋によれば、指導先への訪問予告は、ほとんどが前日。企業所を訪れる場合、一つの場所の指導時間を5~10分に絞り、駆け足で全職場を回る。説明を聞いて積極的に質問をするほか、視察先の人間の健康を気遣う発言も出るという。

金總書記は指導を通じ、40~50代が多い企業所支配人らの教育を試みているとされる。これまでの金總書記は、指導先に十分な事前準備の時間を与え、随行員や一部の幹部としか会話をしないなど、カリスマ性を高めることに主眼を置く動きが目立った。

韓国政府によれば、今年に入って金總書記の現地指導は、昨年の3倍以上にあたる40回以上を数える。指導スタイルの変化が金總書記の動静報道が再開した昨年10月以降に起きたため、専門家の間では「健在ぶりを示し、体制への不安感を取り除く目的がある」との見方が出ている。

북한 관계자는 북한 김정일 총서기의 현지 지도의 스타일이 작년 가을부터 바뀌었다고 전했다. 현지를 예고 없이 방문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한 곳의 방문시간을 짧게 하하는 대신 방문지의 숫자를 늘리는 등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

관계자에 의하면, 현지 지도에 대한 방문 예고는 대부분이 하루 전날. 기업소 방문의 경우, 한 곳의 지도 시간을 5-10분로 줄이고, 빠른 걸음으로 직장 전역을 돈다. 설명을 들으면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외에 현지 사람의 건강을 염려하는 발언도 나온다고 한다.

이는 김 총서기가 현지지도를 통해 40-50대가 많은 기업소 지배인등의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인다.

지금까지 김 총서기는 현지 지도 전에 충분한 사전 준비 시간을 주고, 수행원이나 일부의 간부와만 대화를 하는 등, 카리스마를 높이는 것에 주목적을 두는 움직임이 눈에 띄었다.

한국 정부에 의하면 올해 들어 김 총서기의 현지 지도는, 40회 이상으로 작년의 3배가 넘는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러한 지도 스타일의 변화가 김 총서기의 동정 보도가 다시 나온 작년 10월 이후임을 볼 때 「건재한 모습을 보여 체제 불안감을 없애려는 목적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추천 논문

남북교역의 변화와 남북관계 경색의 경제적 배경

이석(KDI 부연구위원)

2000년대 중반 이후 남북교역은 북한의 대외거래 전반을 유지·확대시켜주는 중추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은 북한의 수출에서 최대 교역 상대국임과 동시에 수입에서도 중국을 능가하는 대북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요컨대 전체 대외거래에서 남북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북중교역보다 작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작다고만 할 수 없다.

남북교역을 통한 경화(hard currency)의 공급은 2000년대 북중무역의 확대를 가능케 하는 경제적 기초로 작용하는데, 북한의 제1 교역국과 최대 대북지원국이 한국이라는 사실은 한국이 북한의 최대 경화 공급국임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남북교역은 일본의 대북 제재에 따른 대일교역의 감소를 대체하는 등 대북 경제제재를 중화시켜 북한 무역의 안정적 확대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남북교역의 중추적 역할은 ① 북한에 대한 경화의 공급과 ② 대북 무상지원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전개되었으나, 2008년 이후 이들 양 축이 모두 무너지면서, 북한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대남 압박에 돌입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2008년 3~4월 비상업적 남북교역(대북지원)이 전년 대비 70% 이상 급락하는 등 감소 추세가 확인되자, 북한은 한국의 신정부에 나름의 제재로 남북당국 간 대화를 전면 거부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경화 수입의 두 축 가운데 하나인 쌀과 비료 지원 등 당국의 무상지원이 중단된 것에 대한 항의이자 민간 차원에서 유지되고 있는 교역과 지원은 유지하려는 차원이었다. 이른바 통민봉관은 이를 입증한다.

5~7월 실질교역 흑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 발생하자, 상대적으로 실익이 적은 금강산 관광에 대해 강경 조치로 맞대응했다.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경화 수입에서 큰 몫을 차지하던 5억 달러에 달하던 실질 교역의 흑자폭마저 감소하면서 북한은 2천만 달러 수준의 금강산 관광수입을 포기하면서까지 북한의 불만을 강경하게 표현했다.

10~12월 상업거래마저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모든 남북교역 추세가 급락세로 반전하자,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위협과 12·1 조치 등 남북대결 태세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해 이 시기를 기점으로 북한이 그간 남북교역에서 누리던 제반 경제적 혜택이 무너져 내렸음을 의미한다.

올해 더욱 강경해진 북한의 태도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남북교역의 위축과 이로 인해 북한경제의 고통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한국을 압박하여 새로운 대북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의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남북관계의 악화로 북한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고통에 반응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런 고통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각종 비경제적 수단으로 한국을 압박하여 남북관계 불안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의 이른바 '기다림의 대북전략'은 특히 올해부터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므로 역사를 보며 나아가더라도 발밑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현명함을 동시에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의 원문은 http://www.kdi.re.kr/kdi/report/report_policy_forum_read.jsp?1=1&pub_no=10779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는 최근 북한 단신

북한축구 해외 진출 적극적

○ 북한축구는 예전 처럼 문을 걸어 잠그는 쇄국 정책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다. 남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갈 수 있는 곳은 다 간다. 그래서 해외파도 생각보다 제법 된다. 해외진출은 선수들의 기량 향상 뿐 아니라 수입의 일부가 북한축구 발전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내한한 25명의 북한 A대표팀에는 해외파가 네 명있다. 정대세(일본 가와사키) 홍영조(러시아 로스토프) 안영학(수원) 김영준(중국 청두)이다.

北, 4월 개학 준비 '한창'

○ 북한은 1996년부터 새 학년도 개학일을 9월 1일에서 4월 1일로 바꾸었으며, 3월을 '학교지원 월간'으로 정해 교재 준비와 교과과정 점검, 교과서와 학용품 공급 등 개학 준비 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다.